



죽비와 목탁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트렌드-아이콘’에 터치하라

한 달 넘게 지속된 촛불시위가 식을 줄 모르자 청와대가 국정홍보기획 재정비에 나섰다. 광우병 사태로 추락한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는 모색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다. 최고경영자(CEO)를 자칭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대상으로 광고주가 됐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과 필요한 것 인양 반복 주입시켜 착각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홍보가 지닌 양면성은 후자의 역할도 담당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시국의 추이를 주목하다 보니 한국불교의 포교문화 방법론을 되짚어 보게 된다. 지속되는 ‘사건·사고’로 얼룩진 위상이 불교계의 구체적인 대안 없이 지리멸렬히 반복되기 때문이다. 묵은 현안에 대한 방안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포교 대상과 방법론에 관한 뚜렷한 전망을 예고할 수 없다는 것이 난제다.

체계적으로 균형 잡힌 포교정책은 없을까. 자유분방한 창작의식 고취를 통한 유행 읽기가 하나의 해답이다. 중생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기 위한 방편론(方便門)은 불교가 으뜸이다. 소화불량 상태인 불교의 활로를 뚫어 줄 명약은 이미 불법 안에 있다. 거대 자본주의

논리 속에 불교문화 또한 하나의 브랜드임을 인정해야 할 때다. 이 브랜드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불교는 산란 밖과 안 어디서도 분명한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했다. 지금 한국불교에 필요한 것이야말로 ‘공감 마케팅’이다.

시장경제 논리에 의하면 불자는 ‘문화 생산자’ 입과 동시에 소비자다. 전법교화 현장에 ‘원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를 제안한다. 부처님이 펼친 전법행은 슈퍼영웅의 활약상과 다르지 않다. 영웅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 시대의 붓다상은 수행전통의 기본은 오롯이 유지하되 ‘트렌드-아이콘(Trend-Icon)’으로 거듭나야 한다. 최근 템플스테이 열풍이아발로 공감 마케팅에 적응한 성공케이스다. 세월과 무관하게 정서의 향수를 자극하는 ‘전원일기’ 붓다도 좋다. 쇼·오락 분야의 개그맨 붓다, 멜로 붓다, 전위 예술 붓다, B-boy 붓다 모두를 포용하자.

‘삶’에 대한 궁극의 물음에 떠오르는 제1아이콘이 불교가 되는 길은 불교가 일상의 문화로 동화되는 것이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 불교는 문화브랜드 선언을 하고 유행을 수용해야 한다. 불법의 바다에는 범고래(프리윌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등축제, 불교행사 넘어 국민축제로”

조계종 포교정책연찬회서 연등축제 방향성 논의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어 연등축제의 국제화·전국화가 가능하다.”

올해 50만여 명이 동참하는 등 전국 최대의 도심축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인 연등축제가 불교계 행사를 넘어 한국 문화의 대표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연등축제를 국민축제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연구실장 도신)은 6월 26일 ‘부처님오신날 국민축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29차 포교정책연찬회를 열었다.

15년 여 동안 행사가 계속 되면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는 문제 제기와 홍보 부족, 행사 진행 인프라 부족 등의 한계를 뛰어넘어 한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토론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축제기획 불무 김유신 대표는 시민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등축제를 불자들이만의 것이 아닌 우리 민족 고유민족의 전통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시민 및 외국인들의 제등행렬 참여공간 확대 ▲전통성과 대중성, 문화관광적 특성 또는 교육적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적극 유치 ▲연등축제 전문요원 양성 ▲축제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난장터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요약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연등축제의 전국적 확산



6월 26일 열린 조계종 포교정책 연찬회 모습.

을 위해서는 연등축제의 데이터베이스화, 지역 연등축제 관련 실무자 협의를 구성, 지역 연등축제 실무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어 NGO미래경영연구소 이영철 소장은 “연등축제에는 전략적 사업기획과 평가체계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며 ▲과학적 전략을 가진 내부역량 및 자원분석, 국내외 수요자 메가트렌드(거대 조류) 예측, 국제축제 분석을 통한 포지셔닝 전략 수립 ▲단계적 목표치와 참여자 타겟 설정, 브랜드 이미지 구체화 ▲시의성 있는 프로그램 매칭 등을 제안했다.

연등축제가 ‘국민축제’로 승화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4일 유인촌 문

화관광체육부 장관의 2008 연등축제 참석은 ‘축제 발전 도약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후 문광부는 조계종과 문화재위원회 등과 함께 연등축제의 무형문화재 선정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연등축제의 홍보 및 편의시설 부족, 통역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연등축제에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불교위원회 박상희 팀장은 “그 동안 서울에서 진행된 연등축제의 성과를 지방으로까지 확산시킬 것”이라며 “연등축제가 전국적으로 퍼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참여자 중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연등축제 다시 오겠다”

올해 참가 외국인 236명 중 95% 응달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 참여했던 외국인 대부분은 축제에 감동했으며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님오신날불교위원회(위원장 지관)는 5월 3~4일 우정국로에서 열린 연등축제에 참여한 외국인 2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분석한 <2008 연등축제 외국인 방문객 조사연구 보고서>를 6월 24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응답외국인 94.7%는 연등축제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연등축제를 포함해 두 차례 이상 방문하겠다는 응답도 19.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외국인들의 47%가 길거리 가로연등

으로 수놓인 거리풍경을 연등축제의 대표 이미지로 꼽았고, 연등축제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제등행렬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들 외국인들은 두 명중 한명이 인터넷이나 지인의 추천으로 연등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응답자들은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휴식공간 부족, 다양한 먹거리 부족 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불교위원회 박상희 팀장은 “화장실 등 편의시설 보강, 외국어 통역서비스 확대, 외국인용 기념품 제작 등으로 국내외국민 함께하는 신형과 포교의 한마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청와대 불자회장 강윤구 사회정책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사임

이명박 정부들어 두번째 청와대 불자회장에 강윤구(사진) 신임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 내정됐다.

청와대불자회는 지난 4월 첫 청별회장에 취임한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이 사임함에 따라 강윤구 신임 사회정책수석을 후임 회장으로 내정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금보험국장장과 차관 등을 역임한 강 수석은 퇴임 후에는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로 재임하면서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연구자문위원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사 등을 맡아 불연을 맺어왔다. 한편, 6월 25일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과 맹형규 정부수석과 함께 취임인사차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강 수석은 이 자리에서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연구자문위원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직을 사임하는 대신, 불교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기반시설부담구역서 사찰 제외를”

조계종, 국토계획이용법 개정안 관련 문제 제기

“입법예고된 기반시설부담구역제 도에서 종교시설, 특히 전통사찰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6월 5일 자로 입법예고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 지난 3월 28일 폐지되었던 ‘기반시설 부담금’이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9월 29일 시행)로 재도입되어 불교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란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시행하는 제도로, 개발행위로 발생하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충실하고 동시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 문제는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종교시설, 특히 전통사찰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관련 조계종 기획실은 6월 26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사찰이나 비영리복지시설의 중·개축시 많은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삼보장재의 낭비는 물론 수행과 포교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서울 견지동에 건립중인 전법회관에 3억원의 부담금이 과잉 부과된 예를 들었다.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구 안국동 175-87 한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대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매드부대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이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단법인 한국불교 삼론종 법계고시 실시

한국불교 삼론종에서는 종단의 전통성을 회복하고 종도 교육의 일환으로 불기 2552년 5월 7, 8일 삼론총림 부석사에서 제1차 법계고시를 실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법계고시 사전강의



■ 법계고시 시험중



■ 법계고시위원

한국불교삼론종 총무원장 이 성월